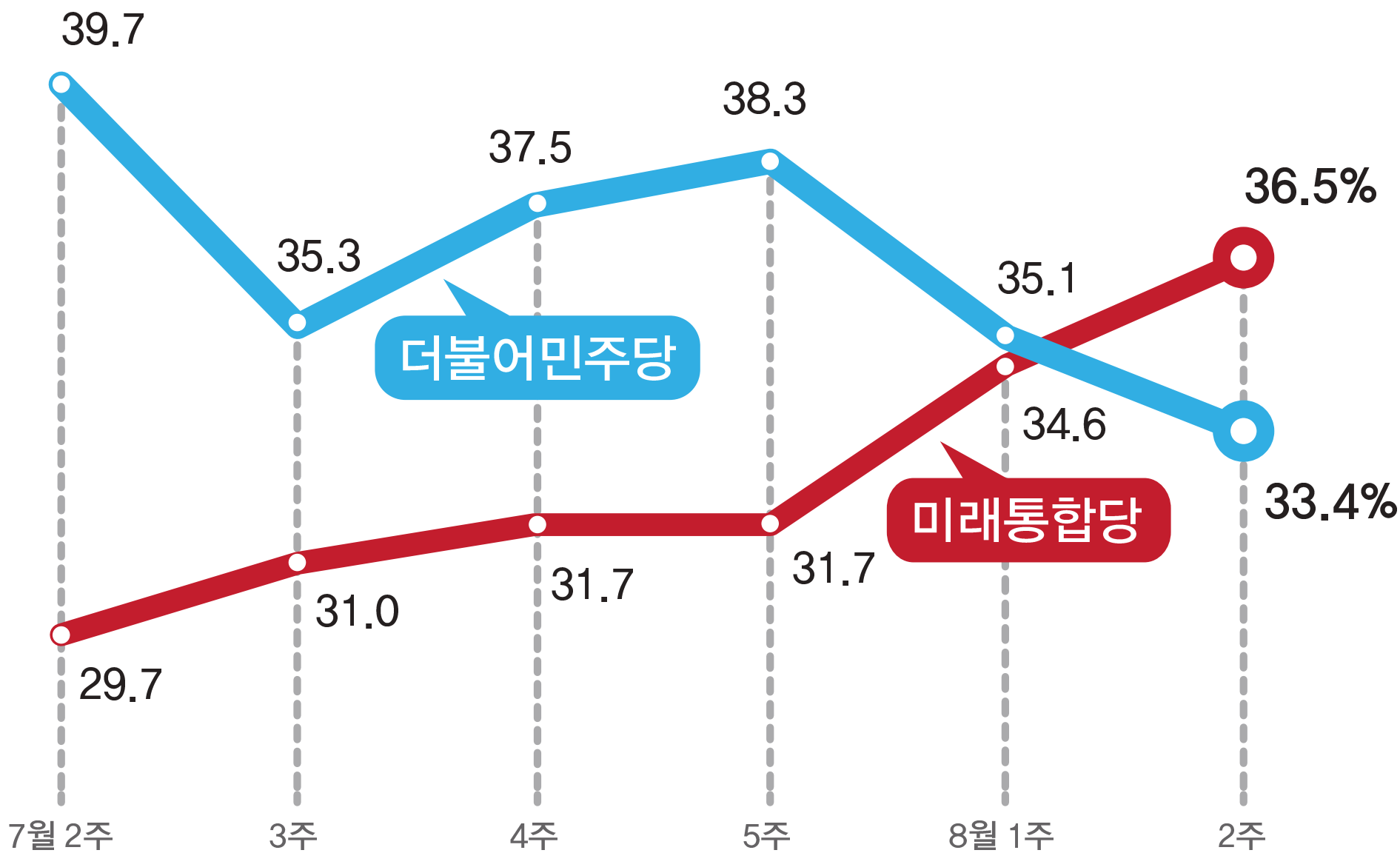


우파 재부상의 책임은 정부의 개혁 배신에 있다



총선 대승
넉 달 만에
정부 지지율
30퍼센트대

3면

시장 지향 정책으로는
주택난 못 막는다

6면

코로나19 재확산,
주된 책임은
정부에 있다

8면

트로츠키 사망 80년
불굴의 투지로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사수하다

4면

발전 비정규직
김용균 사망
후속대책은커녕
임금삭감 강요하는 정부

7면

동유럽 벨라루스 투쟁
노동자 파업과
시위로 독재정권
흔들리다

5면

법무부 낙태죄
대체입법 추진
여성의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7면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과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관을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

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 합시다.

한반도 긴장 증대시킬 국방중기계획 중단하라

김영익

8월 9일 국방부는 향후 5년의 군사력 증대와 전력 운영 계획을 담은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군사비에 301조 원을 쓸 것이다. 그러려면 국방예산이 매년 연평균 6.1퍼센트씩 증가해야 한다. 올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임 등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군비 증대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첨단 무기 도입과 개발에 열을 올려 왔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군비 증가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2배가량 높았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군사용 정찰위성 도입, 다양한 미사일 수량 대폭 확충,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 경항모와 경항모에 필요한 F35B 전투기 도입, 4000톤급 잠수함 건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경항모와 핵잠수함 도입 계획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번에 경항공모함 도입을 공식화했고, 새로 도입할 3600톤급 또는 4000톤급 잠수함이 핵잠수함을 부인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정에 나름으로 대처하려고 이런 계획을 내놨을 것이다. 한반도 주변의 제국주의 강대국 간 경쟁으로 불안정이 점증하면서 각국의 군비도 최근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 주변에서 상대방을 겨냥해 군사력 배

치를 늘리고, 군사훈련 횟수와 강도를 늘리고 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총 4척 항공모함을 보유할 계획이다. 일본도 2025년까지 경항모를 배치하려 한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등으로 동·남중국해 일대도 불안정해지고 있다. 한국에게도 이 일대는 자원 수급과 상품 수출입 등에서 중요한 무역로다. 그래서 지난 7월 민주당 의원 김병주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한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작전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전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도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 보호”를 경항모 도입의 목적으로 꼽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강은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의 불안정을 한층 악화시키는 데 일조할 뿐이다. 아시아 지역의 군비 증강 경쟁을 더 부추길 것이다.

예컨대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그 수량을 대폭 확충하는 것을 보며 주변국들이 가만히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7월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해, 이제 한국은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고체연료는 군사용 미사일에 유용한 연료다. 일각에서 한국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국방중기계획에는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전보다 한층 강화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요격 미사일 보

유량을 3배 늘리고, 탐지 능력과 표적처리능력을 지금보다 몇 배로 향상시키는 것이 그 계획의 골자다. 그러나 이렇게 한국의 MD를 강화할수록 “미국 주도의 MD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정육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또한 원해 해상교통로 보호 등을 위한 전력 증강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요구와 맞물릴 수도 있다. 미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지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는 군사 활동을 동맹국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단계적 군축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완전히 공문구가 돼 버렸다. 한국의 군비 증강은 북한을 더욱 자극할 게 분명하다. 게다가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한국이 핵잠수함 건조에 착수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차관 안일환은 코로나19 위기로 국제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이라며 “재정지출에 대한 특단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이려 하면서도 국방비는 정반대로 늘리고 있다. 그만큼 다른 지출, 즉 노동자와 서민의 생계에 필요한 지출이 동결되거나 깎일 수 있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많은 노동자·서민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말이다.

그러나 진보당이 옳게 지적했듯이, “지금은 총이 아닌 빵이 필요한 시기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군비 증강 계획을 중단하라.



경항모 등 한국의 군비증강은 한반도 주변 정세의 불안정에 일조할 뿐이다. 사진은 한국의 대형수송함인 독도함

총선 대승 너 달 만에 문재인 정부 지지율 30퍼센트대로 추락 정부가 개혁을 배신했기 때문

김문성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39퍼센트까지 떨어졌다(한국갤럽).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도 역전됐다(리얼미터). 민주당이 통합당보다 지지율이 낮아진 것은 박근혜 탄핵 국면 이후 처음이다.

30퍼센트대 지지율은 지난해 후반 조국 논란 때 이후 처음인데, 총선 직후에 지지율이 반토막 난 것이다.

심각한 위기 앞에서 여권 지도부는 급히 몸을 낮추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총선 참패 이후 '태극기 우파'와 거리를 두고 기본소득 도입 등을 주장하며 중도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하며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통합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광복절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지 말라고 했다.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노동계급 등 서민층의 생활수준이 악화되는 데다가 집값까지 폭등한 것이 여권 지지율 급락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실제로 집값 문제에 가장 민감한 수도권과 30~40대에서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진다.

여권은 7월 말부터 다급하게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고 임차인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노동자·서민층의 주거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너무 미흡했다. 그런데도 여권 지도부는 일방 통과 처리를 통합당에 사과했다.

8월 10일 문재인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한 것도 서민층 민심에 염장을 질렀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합니다."

대통령 자신의 이 발언은 부동산 문제가 일부 관료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무능과 실패임을 보여 준다. 이 발언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지지율은 30퍼센트대로 떨어졌다.

부동산 실패의 책임

부동산 정책 실패에 직접 책임이 있는 관료들은 단 한 명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부위기 전환용 청와대 인사는 그나마 소폭에 그친 데다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교통부장관, 경제부총리 등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료들과 비서실장 노영민은 자리를 지켰다. 노영민보다 더 강력한 측근 실세가 몇 없으므로(양정철 등) 그를 선불리 교체했다가는 오히려 정권이 위기를 자인하는 것으로 보일까 봐 고민하는 듯하다.

청와대 인사 개편은 노동계급 등 서민층의 불만에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저 친정체제를 구축해 임기 말 위기에 대비하려는 목적이 다분하다. 국회를 상대하는 정무수석



정부 #덕분에? 문재인 정부가 감염병 전담 병원 지정 해제 등으로 코로나 대비 병상 574개를 줄이자마자 재확산이 시작되고 있다

에 문재인인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최재성을 임명한 것이 그렇다. 민정수석에 감사원 출신을 임명해 최근 청와대와 갈등을 빚는 감사원장을 견제하려는 속내도 드러났다. 국민소통수석에 전경련 기관지 격인 <한국경제> 기자 출신이자 강원도 경제부지사(각종 개발 사업 주도) 출신자를 임명한 것은 재계와의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

연이은 검찰 인사는 현 여권의 위신을 드러냄과 동시에 적폐 청산 약속의 배신으로 여겨진다. 인사의 초점이 박근혜·이명박·양승태·이재용에 대한 수사·처벌에 공을 세운 검사들을 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내친 것은 현 정부 실세들의 부패 의혹을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 자리에 친정부 검사들을 중용했다.

대통령의 부동산 발언과, 무책임과 위선을 드러낸 인사는 문재인 정부가 대중의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불신을 키우고 있다.

뉴딜 펀드

집값 폭등의 배경에는 경제 침체와 시장 지향적 정부 정책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세를 소폭 올린다면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나마 주택난을 얼마간이라도 완화하려면 시장을 거슬러, 값싸고 괜찮은 공공임대 주택을 대량으로(수십만~수백만 호) 공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급 방침은 민간 분양 시장의 재개발 용적률 완화나 그린벨트 해제 같은 규제 완화를 주로 포함할 뿐이다. 분양가 규제는 한사코 거부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말하며 뉴딜 펀드를 새 대책으로 내놔다. 정부 주도로 펀드를 조성해, 부동산 투기로 흘러갈 돈을 생산적 투자로 흡수해, 거품도 해소하고 투자 재원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또한 금융시장의 기능(자금 순환)을 활성화해 기업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시장 지향적 발상이다. 이 아이디어

는 노무현 정부 안에서 삼성과 정부의 연결 고리 구실을 했다고 알려진 이광재 민주당 국회의원이자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이 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계획이 박정희가 도입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과 비슷하다고 밝힌다. “박정희 향수”에 아부해 보려는 것이다. 정부는 “원금 보장” 약속을 홍보했다가 (펀드 투자에 원금 보장 약속은) 위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반복하는 해프닝도 벌였다.(정권 실제 일부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일부 펀드 투자 사기 사건에서도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 자금을 모집한 바 있다.)

한편, 세계시장 침체와 미·중 갈등의 여파 속에서 뉴딜 펀드를 통해 기업에 투자한 돈이 충분한 수익을 낼지도 불투명하다.

경제와 코로나19의 복합 위기 국면에서 정부 개입적 대처로 일시적 효과를 본 정부가 친기업·시장지향 정책으로 급선회(실제로는 회귀)하는 것은 노동자·서민들에게 실망과 반감을 낳게 될 것이다.

‘야당복’ 시효 만료

민주당이 총선 대승으로 청와대·행정부·지방정부와 지방의회들에 이어 국회까지 장악하게 됐다는 것은, 경제 회복, 코로나19 방역 등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처지가 됐음을 뜻한다.

동시에, 개혁 지체와 배신의 책임을 여권이 그동안 개혁 방해꾼으로 지목해 온 통합당에 떠넘기기가 어려워졌다. “야당복”을 더는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다. 지금 지지율 하락은 이런 조건 변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더 근본적으로, 지배계급의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위기의 고통을 서민층과 노동계급에 전가하는 친시장·친기업적인 정책을 실행해 온 것이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이다. 가령 정부는 이번 수해 복구 지원이 현재 확보한 예산으로 충분하고 추경 예산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경제 상태가 더

나빠지는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재정 여력을 갖추고 있길 바라는 기업주들의 염원을 반영하는 것이다. 야당은 선거가 끝나고 나니 추경을 거부한다며 정부의 행태를 꼬집지만 그 당도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에 입각해, 추경을 지지하지 않는다.

조국 논란 국면에서 선명하게 드러난 민주당의 기반(자본가 계급)과 위선이 앞으로 더한층 부각될 것이다. 이것이 지지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민주당한테는 지배계급의 경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

그렇스록 통합당이 반사이익을 얻기 쉽다. 아래로부터 노동계급의 도전이 지금까지처럼 불충분하다면 말이다. 통합당은 기존의 강성 우파 지향성에서 중도층 끌어 안기로 기조를 조정하는 데 일시 성공해 반사이익 효과를 얻는 듯하다.

우파의 광복절 집회는 문재인인의 지지율 추락 때문에 언론 보도보다 컸고 기세도 좋았다. 그러자 문재인은 광복절 다음 날 “국가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 “불법행위 엄단” 등의 권위주의적 용어를 쓰며 개신교 우파들을 맹비난했다. 통합당은 눈치 빠르게 광화문 집회에 불참하고 거리두기를 하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

코로나 재확산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흥행에 실패한 것도 여권 지지율 추락과 관련 있을 것이다. 특히, 이낙연의 상승세가 확연히 꺾였다. 여야 통틀어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서 1위를 달릴 수 있었던 요인(문재인인의 행정 보좌역이라는 점)이 이제는 불리한 요인이 됐다. 수도권 4선 의원에서 대구 출마 도전의 것발을 세우며 제2의 노무현 신화를 노리는 김부겸도 존재감이 약하다. ‘세월호 변호사’로 서울에서 최대 표차로 재선에 성공한 박주민의 개혁 촉구도 시든 채소마냥 신선함이 없다.

반면, 친문의 조직적 안티 공세를 받아 ‘변방’의 정치인 같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통령 선호도 지지율

이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는 1위에 오르는 조사도 나왔다. 대법원 판결로 지식 박탈 위험을 벗어난 데다, 코로나 초기 국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도하는 등 주목을 받은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친문이 다수를 이룬 현 민주당에서 당대표나 대선 후보로 꼽히려면 친문의 낙점이 필요하다. 이낙연, 김부겸은 당내 (친문)기반이 적어서 더 그래야 한다. 위상과 지지율을 제고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이런 조건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경우, 여권에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복절 연휴를 포함한 5일간 신규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했다. 정부는 보름 전인 8월 4일 신규 확진자가 줄었다며 감염병 전담 병원 지정을 해제하는 등 600개에 가까운 병상을 줄여 대응 능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7월 말~8월 초에는 관광업 등 소비 활성화에 기대어 전국 여행주간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재확산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더한층의 재확산은 3월과 달리 정부에 악재가 될 것이다. 집값 양등에 이은 추가적 악재 말이다.

노조 불안정, 4대강, 세월호 진상 규명 문제 등에서 현 정부가 우파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그 연장선 상에 있다는 점도 명백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치적으로 자랑하던 남북관계도 미국이 설정한 제국주의적 한계를 한사코 벗어나지 않으려다 보니 지지부진하다.

문재인 정부에 개혁을 기대하며 정부에 협력하며 개혁 하사를 기다린 전략의 결과는 각종 개혁과 배신, 그리고 통합당의 반사이익이다. 공상적 사회 개혁론의 결말은 언제나 뻔하다. 노동계급이 이윤 논리와 정부의 입발림말을 거부하고 투쟁적으로 싸우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선회하려면 요즘 같은 심대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정치도 좌선회해야 한다.

이는 기층에서 혁명가들이 해야 할 과업이다.

트로츠키 사망 80년

불굴의 투지로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사수하다

헤이즐 크로프트

1940년 8월, 위대한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는 당시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에게 암살당했다. 트로츠키는 불평등과 차별에 반대하는 투쟁과 국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다. 살해당하기 불과 몇 달 전인 1940년 2월 그는 이렇게 썼다.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물론 이런저런 실수는 피하려고 노력할 테

지만, 인생의 큰 줄거리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공산주의가 인류의 미래라는 나의 신념은 조금도 식지 않았으며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오늘날 더욱 확고해졌다.”

트로츠키는 인생의 대부분 동안 자신의 신념과 혁명적 활동 때문에 탄압받았다. 1897년 그는 18살의 나이로 러시아의 전제 군주(차르) 체제에 반대해 싸우다 처음으로 수감됐다. 이어 그는 시베리아로 유배됐지만 해외로 탈출했다.

지배자들은 언제나 스탈린의 공포통치가 러시아 혁명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주장하며 러시아 혁명을 비난한다. 그들은 혁명이 반드시 독재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트로츠키의 사상과 투쟁은 그러한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 준다. 스탈린 체제는 트로츠키가 쟁취하려 했던 사회와는 정반대였다. 노동계급이 자력 해방될 수 있다는 신념이 트로츠키의 사상과 투쟁의 핵심이었다.



혁명의 지도자

1905년 러시아에서 혁명의 불길이 타오르면서 트로츠키는 혁명 운동의 지도자로 떠올랐다. 겨우 스물여섯의 나이에 그는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의장으로 선출됐다. 소비에트는 혁명 과정에서 생겨난 민주적으로 선출된 노동자 평의회였다.

1905년 혁명이 패배하자 차르는 다시금 트로츠키를 수감시켰다. 수감돼 있는 동안 트로츠키는 소책자와 평론을 써서 몰래 밖으로 내보냈다. 트로츠키는 러시아 같은 경제적 후진국에서도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록 러시아의 인구가 대부분 농민이지만 330만 노동자들이 대부분 페트로그라드 소재 4만 명 규모의 푸질로프 공장 같은 초대형 공장들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에 그는 주목했다. 트로츠키는 1905년 혁명 패배 뒤에 서게 된 법정을 연단 삼아 이러한 혁명적 신념을 밝혔다.

이번에도 트로츠키는 시베리아로 유형가야 했다. 또 이번에도 그는 얼어붙은 황무지를 가로질러 망명했고 해외에서 혁명 운동 건설에 나섰다.

트로츠키의 신념이 옳았음은 1917년 혁명으로 입증됐다. 노동자들

이 차르 체제를 분쇄하고 그들 자신의 국가를 세운 것이다.

노동자들은 공장 · 은행 · 사무실 · 교통수단 등에 대한 통제력을 장악했다. 농민은 포악한 지주들에게서 농지를 몰수했다. 레닌과 트로츠키가 지도하는 볼셰비키 당은 노동자들이 새 사회를 건설하는 데 착수한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트로츠키는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의장으로 선출됐고 봉기를 직접 조직했다. 또, 새로운 노동자 국가를 건설하는 데서도 중요한 구실을 했다. 트로츠키는 협상을 통해 독일

과의 강화조약을 체결했고, 신생 노동자 국가는 제1차세계대전의 대학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는 각국 공산주의 조직들의 국제적 기구로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제3인터내셔널(코민테른)의 지도자가 됐다. 그리고 그는 5백만 명의 적군을 지도해 14개국의 군대와 반혁명 세력들에 맞서 혁명 러시아를

지켜 냈다.

무엇보다도 트로츠키는 혁명이 살아 남으려면 국제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로츠키가 옳다는 것은 비극적인 방식으로 입증됐다. 비록 적군이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반혁명 세력을 패퇴시키기는 했지만, 노동자 국가는 경제 파탄과 국제적 고립을 면치 못했다.

반(反)스탈린 투쟁

스탈린은 이 같은 경제 파탄과 국제적 고립이라는 상황을 배경으로 권력을 장악했다. 1920년대를 거치면서 권력은 스탈린을 중심으로 성장하던 관료층에 넘어갔다.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 노선은 혁명이 확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짓밟았다.

1920년대 말 스탈린은 대규모 공업화 계획을 강제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는데 서구와 경쟁하기 위해서였다. 노동자들은 무자비하게 착취당했다. 스탈린은 지배력을 굳히기 위해 1917년의 기억과 혁명을 주도한 세대를 물리적으로 제거해야 했다. 1930년대에 그는 여론 조작용 재판의 형식을 빌어 혁명 지도자들을 모두 처형했다. 1917년 레닌의 중앙위원회 소속 지도부 20여명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했다(당시 스웨덴 대사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다른 사람들은 하나같이 총살 · 사망 · 실종 · 자살한 것으로 기록되거나 그냥 사라졌다. 스탈린은 트로츠키를 역사에서 지워 버리려 했다. 필름까지 조작해 혁명기의 사진들에 찍힌 트로츠키의 모습을 지웠다.

트로츠키는 스탈린에 맞서 사생결단의 투쟁을 벌이며 스탈린을 “혁명의 무덤을 파는 자”라고 불렀다. 트로츠키는 1927년 당에서 축출당했고 1929년에는 소련에서 추방돼 이 나라 저 나라로 도망다녀야 했다. 스탈린은 트로츠키의 가족들도 박해했다.

그의 첫째 아내는 시베리아의 강제 노동수용소에서 사망했다. 그의 네 자녀들 가운데 둘은 스탈린이 보낸 암살자에게 살해당했고 한 명은 자살했다. 남은 딸 한 명은 남편이 유배지로 끌려가자 건강이 악화돼 죽었다. 트로츠키의 가족들은 배우자와 자녀들까지도 처형당하거나 “실종”됐다.

그러나 트로츠키는 이처럼 엄청난 불행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스탈린에 맞서 싸웠다. 그는 《러시아 혁명사》, 《배반당한 혁명》 등의 탁월한 저작을 통해 스탈린주의가 진정한 볼셰비키 전통과는 공통점이 전혀 없음을 역설했다.

강제 공업화에 대해 그는 이렇게 썼다. “노동에 지급하는 보수가 불평등한 문제에서 소련은 자본주의 나라들 못지 않을 뿐 아니라 훨씬 더 불평등하다.” 트로츠키는 이러한 “[혁명의] 절멸

과정”이 소련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르주아적 가족이 복원되고 미화되면서 여성차별과 성매매가 부활했다. 스탈린이 뺀 마수는 “강제수용소, 과학적 농업, 음악 등 전 분야”에서 혁명을 목췌했다. “마르크스 · 엥겔스 · 레닌이 꿈꾼 노동자 국가와 현재 스탈린이 수반으로 있는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보다 더 극명한 대조를 상상하기는 힘들다.”

여론 조작용 재판의 광기가 극에 달했을 때 트로츠키는 이렇게 썼다. “이번 숙청으로 볼셰비즘과 스탈린주의 사이에는 피를 머금은 선 정도가 아니라 피의 강물이 흐른다.”

피의 강물

트로츠키는 터키 변방의 섬에서든, 노르웨이의 소도읍에서든, 생을 마감한 멕시코에서든 항상 러시아 혁명의 진정한 유산을 이어받는 혁명적 전통을 건설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사건 현장들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도 트로츠키는 자신의 가장 탁

월한 분석과 가장 중요한 저작들을 1930년대에 남겼다. 경제 위기, 파시즘의 부상, 제2차세계대전까지의 과정이 대표적이다. 불행히도 트로츠키에게는 사건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로츠키의 저작은 우리를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과 연결시켜 준다는 점에서 귀중하다. 스탈린의 히트맨들이 여러 대륙을 누비면서까지 트로츠키를 추적해 결국 그를 살해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트로츠키를 살해한 라몬 메르카데르는 스탈린의 지령을 받고 행동했다. 그는 소련에 관한 자기 글을 봐 달라는 구실로 8월 20일 트로츠키의 집을 방문했다.

메르카데르는 기사를 읽는 트로츠키의 후두부를 엮음도끼로 내리쳤다. 트로츠키는 가장 최후까지도 살기 위해 투쟁했다. 한 목격자는 이렇게 말한다. “트로츠키는 끔찍한 비명을 질렀고 자신을 가격한 자에게 달려들었다. 트로츠키는 그의 손을 물어뜯었고 그에게서 무기를 떨어뜨려 놓은 후 비틀거리며 물러섰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아내에게 트로츠키는 “결국 일이 벌어졌어”

하고 말하고는 바닥에 쓰러졌다.

다음날 트로츠키는 숨을 거뒀다. 장례식 때 그의 관이 멕시코시티 교외의 노동자 지구를 지날 때 수많은 빈민이 대열을 이뤄 그 모습을 지켜봤다.

하지만 스탈린은 트로츠키가 표상하는 혁명적 전통까지 살해하지는 못했다. 트로츠키의 투쟁과 글들 덕분에 새 세대의 사회주의자들은 아래로부터 사회주의 전통을 되살리고 그런 전통이 구현된 1917년 혁명으로부터 영감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다음 번에 일어날 혁명에서 민중은 스탈린이 아니라 트로츠키의 이름을 외칠 것이다. 트로츠키 자신이 1927년에 썼듯이, “역사의 복수는 가장 강력한 [공산당] 사무총장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1710호, 번역 김중환

▶ 관련 YouTube 토론 영상

트로츠키의 삶과 사상

- (1) 혁명을 이끌고 지키다
- (2)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사수하다

wspaper.org/m/24357

동유럽 벨라루스

노동자 파업과 시위로 독재정권 흔들리다

토마시 텡글라-에반스

8월 17일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정권을 부지하느라 진땀을 뺐다.

그 전주에 벨라루스에서는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대중 항쟁, 특히 파업이 벌어졌다.

8월 16일 수도 민스크에는 30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백색과 적색의 바다를 이루었다. 백색과 적색은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깃발의 색이다. 전국 각지에서도 수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과거에 루카셴코를 지지하던 곳에서도 그랬다.

다음 날 아침 민스크는 시위대와 파업 노동자들로 붐볐다.

루카셴코는 대형 수송차를 제조하는 민스크차륜트랙터공장(MZKT)에서 “인민들과 만날” 준비를 했다. 루카셴코는 노동자들에게 말했다. “선거는 치러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목숨을 끊지 않는 한 다른 선거는 없을 것입니다.”

루카셴코가 말을 마치자마자 노동자들은 외쳤다. “물러나라!”

루카셴코의 권위가 하도 땅에 떨어져서 그가 연설하는 장면은 마치 1989년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이 차우셰스쿠의 몰락을 연상케 했다.

국영 뉴스 채널 STV와 ONT, 라디오 방송국 BТ 노동자들도 8월 16일에 일손을 놓았다.

콤포무니스티체스카야가(街)에 있는 ONT 건물 바깥에서는 큰 시위가 열렸다.

과학 연구 시설 벨레네르고세티프로엑트의 노동자 약 130명도 일손을 놓고 집회에 참가했다. 이 노동자들은 앞서 경영진에게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동자들은 코즐로프 전자 부품 공장, 민스크차륜트랙터공장, 민스크자동차공장(MAZ), 민스크트랙터공장(MТЗ) 등이 작업장 저 작업장을 행진하고 다니며 서로를 응원했다.



26년 독재자에 맞서 들고 일어난 시위대 사진 속 깃발은 벨라루스 반정부 운동의 상징이다. 8월 16일 수도 민스크

수도 민스크 바깥에서는 칼룸 비료업체인 벨라루스칼리의 칼룸 광산에서도 작업이 중단됐다는 보도가 있다. 정권의 수중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업으로 꼽히는 나바폴라츠크 정유소에서도 노동자들이 아침에 집회를 열었다.

산업용 차량 제작 업체인 벨라스에서도 노동자들이 행진하여 공장들을 돌며 시위 지지를 호소했다.

벨라루스 남동부의 줄로빈시(市)에 있는 벨라루스제철(BMZ)에서도 노동자들이 공장 바깥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영상으로 찍혔다.

민스크의 발전소에서도 노동자들이 연대 행동에 나섰고, 민스크베어링공장 노동자들은 완전히 작업을 멈췄다.

지난 한 주 내내 여러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이 경찰 폭력과 부정 선거에 항

의하는 행동을 했다. 일손을 놓은 노동자도 있었고 점심 시간에 시위를 하거나 경영진에게 공개적으로 요구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부정 선거

8월 13일 민스크에서는 철도 노동자, 안카 쿠팔라 극장 노동자들, 제약회사 벨메프레파라티의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단했다.

벨라루스 서부에 있는 도시 브레스트와 바라노비치에서는 의사들이 “우리는 이 나라의 평화를 지지한다”며 시위에 나섰다.

브레스트 소재 헤파이스토스 가스기회회사 노동자들은 점심 시간에 모여 “퇴진하라” 구호를 외쳤다.

그로드노에서는 섬유 기업 콘테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

정권의 수중에 있는 가장 큰 회사로 꼽히는 석유화학 기업 그로드노아조트의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와 지역 주민에게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지난주 민스크트랙터공장의 작업 중단은 정권이 얼마나 신망을 잃었는지를 잘 보여줬다. 8월 11일 각종 부서에서 기술자와 기계공 약 70명이 작업을 중단하고 공장 건물 밖에서 집회를 했다. 그러자 그 공장의 이데올로기 담당 부사장이 점심시간에 나와 노동자들을 협박하여 작업에 복귀시키려 했다.

그러나 그의 협박은 먹히지 않았다. “더는 아무도 이데올로그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넥스타라이브’는 보도했다.

루카셴코는 대선에서 81퍼센트를 득표해, 11퍼센트를 득표한 자유주의자 후보 스바틀라나 치하놉스카야를 꺾었다며 승리를 선언했다.

치하놉스카야는 8월 11일 리투아니아로 피신했다. 치하놉스카야는 새로운 영상을 공개해 자신이 벨라루스의 임시 지도자가 돼 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온갖 서방 지도자들은 자유를 요구하는 벨라루스인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척하며 위선적이게도 경찰 폭력을 규탄한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유럽연합에 벨라루스 시위를 지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마크롱 정권은 경찰을 동원해 노란 조끼 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려 했었다.

루카셴코의 권위주의적 정권을 대체할 진정한 대안은 자유 시장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데에 있지 않다.

진정한 대안은 거리에, 민주주의, 사회 정의, 노동자가 운영하는 사회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있다.

서방과 러시아의 개입 모두 반대한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1990년대 구소련·동구권 몰락 후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집권했다.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은 “사회주의”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들에게 통제권이 전혀 없는 국가자본주의 체제였다.

지배계급인 국가 관료는 자유 시장 자본주의 체제의 사장들과 똑같이 행동했다.

그들의 목표는 이윤 축적과 국제적 경쟁에서의 우위였지 평범한 사람들의 필요가 아니었다.

1989년 혁명으로 동구권 국가들이 무너졌고, 소련은 15개 공화국으로 쪼개졌다. 이 국가들은 국가자본주의에서 자유 시장 자본주의로 변모했다.

공산당 정치인들이 “민주주의” 정치

인으로 옷을 갈아입었고 국영 기업 관리자들이 민간 기업 경영자가 됐다. 일례로, 루카셴코는 농업 기업 관리자 출신이다.

[국가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거리에 나와 자유와 사회 정의를 요구했던 평범한 사람들은 이제 자유 시장 정책의 대가를 치렀다.

이런 과정이 벨라루스에서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 조금 다르게 전개됐다.

벨라루스의 스탈린주의 관료들은 특히 보수적이었고 개혁이라면 무엇에든 저항했다.

그러나 1991년 4월 강력한 노동자 시위가 잇따르며 공산당을 뿌리째 뒤흔들었다.

민스크 소재 국영 기업 80곳 이상에서 파업이 벌어졌는데, 그중 몇몇은 민

주 노조들이 조직한 파업이었다.

상층부의 분열과 시위가 결합된 상황의 압력에 떠밀려 벨라루스 의회는 1991년 8월에 독립을 선포하게 됐다.

그러나 독립 후에도 옛 지배 관료 출신의 인사들이 상당한 권력을 유지했다. 소련이나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 달리 벨라루스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지배가 불안정해질까 봐 대규모 시장 자유화 조치를 추진하지 않았다.

민주 노조

1994년 루카셴코는 벨라루스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치러진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했다.

루카셴코는 제국주의 경쟁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려는 도박을 벌였다.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EU)이 저마다 벨

라루스에 눈독 들이는 것을 이용하려 한 것이다. 루카셴코 정권은 러시아 진영에 잔류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러시아에게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았고 그것으로 벨라루스 경제를 떠받쳤다.

최근에 루카셴코는 서방과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둘 모두 러시아의 경쟁자였고, 이를 위해 몇몇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했다.

그중 하나가 실업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사회적 기생충 퇴치령”이다. 이는 거대한 시위를 촉발했고 정권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데에 한몫했다.

벨라루스가 서방과 조금 가까워지는 것에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크게 반발했다. 푸틴은 벨라루스에게 러시아와의 합병 협상을 강요했다. 루카셴코는 합병을 거부했다.

벨라루스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경쟁은 민주주의 대 독재의 싸움이 아니다.

서방 지도자들이 자유를 요구하는 투쟁을 지지하는 양 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경쟁 상대를 약화시키려는 것일 뿐이다.

희망은 거리에 있지 동·서구의 제국주의에 있지 않다.

지난 한 주의 대중 행동들은 코로나 19가 엄습하기 전 올해 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저항의 물결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718호, 번역 김준효

이 글은 8월 17일 본지 웹사이트에 선 공개한 기사를 개정·증보한 것이다.

시장 지향 정책으로는 주택난 못 막는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대거 확충하라

강동훈

집값 급등이 계속되자 정부는 7·10대책, 8·4대책 등 부동산 관련 대책들을 연이어 발표했다.

7월 임시국회 막바지에는 여당이 단독으로 '임대차 3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거래신고법)'과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을 전광석화처럼 처리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에 대응하는 게 급박했던 것이다.

대책들을 내놓은 후 정부는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하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주간)이 지난달 초 0.09퍼센트에서 최근 0.02퍼센트까지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미 올라 버린 집값·전셋값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가 '집값 안정' 운운하며 자화자찬하는 꼴이 다시 한번 사람들의 염장을 질렀다. 최근 청와대 비서관과 정부 차관급 인사에서 1주택자만 선정했다고 발표하자, '집 팔고 벼슬한다'는 비아냥이 나왔다. 결국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통합당이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지지율이 역전됐다. 대통령 평가에서도 부정이 긍정을 앞섰다.

문재인이 급작스레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제안한 것도 집값 상승을 잡는 게 쉽지 않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에게 온갖 특혜를 주며 부동산 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고, 노동자·서민에게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지 않으면 나만 손해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 경기 침체와 코로나 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젊은층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올해 3~4월 수도권 순유입 인구(국가통계포털 인구가동통계 자료 분석)는 전년 동기 1만 2800명보다 2배로 늘어난 2만 7500명으로 이들의 대부분(75퍼센트)은 20대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속에 늘어난 유동성이 집값 상승을 낳는 데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에 올 수밖에 없는 청년들은 더욱더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23차례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



자본주의의 불합리성을 보여 주는 부동산 시장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는 도저히 치솟는 집값을 따라잡을 수 없다

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8억 4684만 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고, 전국의 전셋값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올해 7월의 은행 가계대출도 전월보다 7조 6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4년 집계 시작 이래 7월 기준 최대 증가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주택 매매 등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부동산 3법'으로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을 대폭 올렸으니,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장려해 온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집은 종부세 합산에서 빼주고,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은 임대사업자 기간 만료 때까지 계속 유지해 주기로 했다. 올해 1분기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51만 1000여 명으로 늘어났고, 등록 임대주택 규모도 156만 9000채나 되는데 말이다. 기존의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얼마나 집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7월 서울에서는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가 7005건으로,

2008년 4월(7686건)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정부는 아파트 임대사업자들에게는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혜택을 없애기로 했지만,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게다가 정부가 규제 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은 제한했으나 다세대·연립주택은 대출 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여전히 '갭투자'가 가능하다.

정부는 당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2년) 더 연장하자고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되고, 집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입자의 계약 기간 연장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계약 갱신 청구권제). 계약이 한 차례 연장될 때, 전·월세값은 종전 계약의 5퍼센트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전·월세 상한제).

전체 가구 중 약 40퍼센트가 임차 가구이고, 서울은 50퍼센트가 임차 가구인 만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법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때,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4년마다 쫓겨날 수 있다.

집값 들썩이게 만드는 친시장적 공급 확대 정책

한편, 정부는 8.4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내놓았다. 미래통합당과 우파 언론들이 공급이 늘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떠들어대는 주장에 타협한 것이다.

정부는 태릉골프장, 용산 기지창 등을 택지로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재건축에 참여하는 '공공참여 재건축' 등을 시행해,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 2000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공공참여 재건축이다. 공공참여 재건축은 현재 250퍼센트인 용적률을 300~500퍼센트로 확대하고, 층수도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방안이다. 대신 용적률 증가로 추가된 물량의 50~70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도록 해, 절반은 장기공공임대로, 나머지 절반은 공공분양 물

량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방안으로 5만 호가 추가로 공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 방안이 정부 계획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늘어난 용적률 200퍼센트 중 절반을 기존 집 주인들에게 주는 막대한 혜택이지만,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은 주변에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자신들의 집값이 안 좋은 영향을 받을까 봐 우려하고 있다. 또, 초고밀도 재건축이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가 정부의 대책 발표 뒤 아파트를 35층 이상으로 지을 수 없게 하는 기존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논란도 벌어졌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최근의 집값 폭등이 주택 공급이 부족해 생긴 게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새 주택 500만 채가 공급됐지만 이 중 260만 채는 다주택자가 사들였다(2020년 8월 4일 경실련 성명서). 앞서 봤듯이 등록 임대주택 수만도 150만 채가 넘는다. 2018년 주택 3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3기 신도시 건설 계획도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

정부 대책 중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일부에 불과하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70퍼센트는 판매용 아파트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매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건설 과정에서는 건설업계가 이득을 보고, 이후에는 집부자들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저렴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늘리라는 요구는 계속 무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주택을 시장의 수요 공급에 내맡기면서 거둬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 최근에도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아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번 기름을 붓고 있을 뿐 아니라 등록 임대사업장에 대한 혜택을 확실하게 종료하지 않는 등 여전히 친시장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주택 정책은 시장의 이윤 논리가 아니라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우선할 때 가능할 것이다. 그동안의 행보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불평등 완화와 자본주의 경제 위기의 고통 전가에 저항하는 계급투쟁을 강화하면서 저렴한 영구 공공임대주택 증설을 요구해야 한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종교동맹회 ☐ 기타) _____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olidarity.org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이름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구독기간 ☐ 1년 ☐ 2년 ☐ 2년 이상 ()년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ws@wspaper.org

발전 비정규직

김용균 사망 후속대책은커녕 임금삭감 강요하는 정부

신정환

고(故) 김용균 씨가 2018년 12월 11일 태안석탄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사망한 지 619일(8월 19일 현재)이 되었지만 그의 동료들은 여전히 별반 다르지 않은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

2인 1조가 도입됐지만 충원된 노동자는 계약직 신세다. 발전소 현장에 흠날리는 1급 발암물질에 대한 대책도 고작 특급마스크 1장이 전부다.

문재인 정부는 김용균 씨 사고 후속 대책으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정규직 전환, 고용 안정, 노무비 착복 근절 및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지켜진 것이 단 하나도 없다. 문재인 정부가 배신한 다른 개혁 약속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휴지통에 처박혀 있다. 최근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시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후속 대책 이행과 죽음의 외주화 금지를 촉구”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를 성토했다.

“현 정부와 국회에 묻고 싶습니다.



8월 12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고(故) 김용균의 동료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기자회견'

합의안에 나와 있는 정규직 전환은 왜 아직도 안 되고 있는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무비를 삭감 없이 지급하라고 했는데 [하청업체가 여전히] 월급은 절반만 주는데 왜 보고만 있는지,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하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발전소에서는 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 오는지, [태안발전소 내에 김용균 추모 조형물을] 유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기로 했는데 왜 제대

로 안 되는지, 정부나 국회는 그 어떤 해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용균 씨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커녕 재판조차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3일에서야 발전사 원·하청 대표자들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조차도 유족 등이 끈질기게 촉구하고 투쟁한 결과다. 정부와 여당은 김용균 씨 사고처럼 산재 사고를 낸 기업과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도 굽뜨다. 김용균 씨 사망 이래로 중대 재해가 반복되는 현실인데도 말이다.

기후 위기 대처?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여전히 민간하청업체 소속인 것에서 보듯, 김용균 씨 사망의 원인인 발전 민영화·외주화와 같은 경쟁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와 발전사들이 직접고용만큼은 한사코 거부한 이유 기도 하다.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이유로 기후 위기 대처를 위해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30기를 폐쇄할 계획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위선적인 책임 회피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은 정작 화력 발전 용량은 되레 늘릴 뿐 아니라 재벌 소유의 민자 석탄화력발전소는 새로 지어질 계획이다. 정부와 발전사들이 실제 화력발전소를 포기하지도 않으면서 이를 핑계만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발전사 원·하청들은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불안을 부추기며 노동자들에게 더 나쁜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다. 교대제 개편 과정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1인당 1천만 원이 넘게 임금을 삭감하려 하는 것이다.

기후 위기 대처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는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해야 하고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를 마땅히 보장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도, 발전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도 모두 그 책임은 자본주의로 이익을 누린 기업주들과 이를 뒷받침해 온 정부에 있다.(발전사들의 최종 원천인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8200억 흑자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커다란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투쟁을 재개하려 한다.

정부가 약속한 고 김용균 씨 산재 사망 대책 이행이든 산재를 막기 위해서든 노동자들의 집단적 투쟁이 확대되는 것이 관건이다.

법무부 낙태죄 대체입법 추진

여성의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전주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낙태죄 대체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법무부가 정부입법으로 낙태죄 대체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몇몇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법무부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가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한다. 세부 사항이 담긴 정책위 권고안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낙태 반대 진영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8월 14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정책위의 낙태죄 전면 폐지 권고안에 항의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서도 태아의 생명보호를 공익으로 인정하고 있”고 “낙태죄 완전 폐지는 헌

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낙태죄 완전 폐지 방향의 입법 추진에 대하여 항의”했다.

교활하게도 낙태 반대 진영은 낙태 처벌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은 현재 판결의 공백과 한계를 파고들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저지하고 낙태 허용 범위를 최대한 억제하고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낙태 시술 의사에 대한 처벌 조항 유지·강화, 임신 5~8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미국 주(州)의 모델, 낙태 전(前) 숙려기간과 필수 상담제도를 통해 여성을 압박하는 방안 등을 거론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급락에서 반사이익을 얻으며 자신감을 회복한 우익들이 낙태 반대 운동에 힘을 보탬 수 있다. 낙태권 지지자들은 이런 반격에 맞설 태세를 갖춰야 한다.

우파의 반발과 문재인 정부

한편,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정책위 권고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일각에 있다. <한겨레>는 “추미애 장관이

‘낙태죄 비범죄화’에 대한 뜻이 확고하다. 정책위에 대체입법 방향을 자문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한 정책위원의 말을 인용하며 대체 입법 소식을 보도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정책위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불확실하다. 법무부는 2018년에 낙태죄 합헌 의견서를 낸 바 있다. 그리고 현재 판결 뒤 지금껏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낙태 찬반 진영의 눈치만 보며 낙태법 개정 논의를 미뤄 왔다. 총선을 앞두고는 “사회적 합의”와 “속도 조절” 운운하며 더욱 몸을 사렸다.

오늘날 지배자들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그에 따른 경제력·국방력 약화를 크게 우려한다. 게다가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이므로 문재인 정부는 우파의 반발을 더욱 의식할 수 있다.

법무부는 독일 법안을 참고해 낙태죄를 유지하고 제약이 많은 대체 법안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독일 법안은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만 허용하고 형법상 낙태죄도 유지된다. 또 낙태 전 상담이 의무화되고, 그 내용은 “임신의 지속을 위하여 부녀를 격려하고”, “태아가 생명에 대한 독자적 권리를 가지는 것[을] ... 부녀에게 인식시”키는 것이다.

이런 안은 낙태죄가 폐지되고 낙태권을 포함한 재생산권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여성 대중의 염원을 거스르는 것이다.

낙태죄 전면 폐지는 물론, 기간과 사유의 제한 없이 낙태가 전면 합법화돼야 한다. 상담·숙려 기간 의무화 등 불필요한 제약도 없어야 한다. 낙태 시술과 낙태약은 무상으로 제공돼야 하고, 낙태 유급 휴가도 보장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낙태 문제에서 회피와 눈치 보기로 일관해 왔다. 낙태 반대 진영의 움직임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낙태권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 바이든과 해리스의 역겨운 이력
- ★ 한·일 관계의 어제와 오늘 ① 냉전 시기 한·일 지배자들은 어떻게 유착했는가?
- ★ 고용유지지원금 만로 임박, 해고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
- ★ 공무원보수위원회 시행 2년: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하려면 투쟁해야 한다
- ★ ‘인공궁 사태’에 비정규직·정규직·취준생 모두 불만: 문재인 개혁의 성격 보여 준다
- ★ 임금체불·보험료 체납으로 고통받는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
- ★ 신간 《최근 한국 현대사: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 우파와 중도파의 역사 왜곡에 대한 좋은 해독제

추천 신간

최근 한국 현대사
—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

김동철·김현옥·한규한 지음, 책갈피, 280쪽, 13,000원

추천 책

마르크스주의로 본 한국 현대사

김동철·김현옥·한규한 지음, 책갈피, 280쪽, 13,000원



코로나19 재확산 주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장호중

한국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크게 확산되고 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17일 현재 2000명을 검사했는데 그중 315명이 확진돼, 검사자 대비 확진자의 비율이 16.1퍼센트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최근 전국적으로 1퍼센트 미만이었을 대우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던 때에도 5.7퍼센트를 넘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의 양성률이 이토록 높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교인들 사이에 감염이 확산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도 최소 11~12곳에서 집단 발병이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사랑제일교회조차 지역사회에 광범하게 퍼진 감염의 한 말단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집단 발병의 규모가 큰 만큼 다른 곳으로 확산되고 있을 개연성도 크다. 이미 해당 교회 신자들이 사는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견되고 있다.

정부가 자랑하던 ‘추적’ 능력이 감염 전파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사랑제일교회가 속한 성북구의 경우 역학조사관을 10배나 증원했는데도 매일 늘어나는 확진자의 동선 파악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추세가 이런 주말까지 이어지면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미국 뉴욕 등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을 목도하게 될지도 모른다.

고령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큰 걱정거리다. 젊은 확진자들에 비해 병원 입원율이나 치명률이 높기 때문이다. 3월에 대구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당시에는 환자 1600여 명이 입원도 하지 못하고 그중 일부가 숨지는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의료붕괴’라고 부르는 상황인데, 확진자가 급증한 많은 나라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수는 2월 말~3월 초 대구에서 벌어진 일이 그랬다고 지적한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야 할 환자의 절반 이상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했다. 사망 환자 중 70퍼센트는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지 못했다. 사망 환자 대부분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소수(15퍼센트가량)라는 점에 착안해 중환자 병상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병상 이용 효율을 일부 개선했지만 절대적 부족을 해소할 수준은 못 되는 듯하다.

이미 수도권외의 병상은 부족 신호를



방역을 완화하고 외식·여행을 장려한 7월 말~8월 초에 확산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보이고 있다. 방역 당국이 추가 확보에 나섰지만 여의찮다. 다른 입원 환자들과의 격리를 위해 병실도 개조해야 하고 의료 인력도 새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 병상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환자 수가 줄어든다며 최근 민간병원에 확보해 둔 병상마저 줄였다. 비용 절감도 노렸겠지만, 코로나19 통제에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 주려 했던 듯하다.

민간 병원의 신속한 협조를 바라기도 쉽지가 않다. 민간 병원이 정부의 지시를 회피할 수단과 명분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공공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한 것이다.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가 코로나19 방역에 해악적 효과를 끼친다는 점은 세계적으로 입증돼 왔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의 여러 나라가 방역 조치를 완화한 뒤 여지없이 재확산이 벌어져 거리두기와 국경 통제 등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사실 한국에서 코로나19 방역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데에는 정부가 초기부터 방입적으로 하지 않고 정보 공개와 진단, 격리 등에서 권위주의적 방식을 일부 쓰면서까지 경각심과 공포심을 고조시킨 것의 효과가 컸다. 이 과정에서 ‘정통’ 그리스도교 전체가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 같은 종교 집단을 마녀사냥하기도 했다. 다른 나라들의 재난 상황 덕분에 이런 조치들이 어느 정도는 용인된 면이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총선 이후 스스로 방역의 기초를 허물어 왔다. 무엇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격리(거리두기)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거듭했다. 1월 중순과 4월 말, 5월 말에 세 차례나 ‘방역 성공 - 경제 활동 정상화’ 신호를 내보냈다가 며칠 만에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일을 반복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7월 8일 전국 교회에 내렸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7월 24일에 해제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는 정부가 외식·숙박 할인권을 대량 배포했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허용했다. 많은 사람들이 봄을 맞아 야외 활동을 시작한 4월에 문재인 정부가 방역 수준을 크게 낮춘 것처럼, 이번에도 정부는 경기 활성화 메시지를 내보냈고 경계심은 한층 약해졌다. 질병관리본부가 주 단위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처럼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강조할 때마다 경계심은 크게 낮아졌고, 최근에는 응답자의 46퍼센트가 ‘국내 상황이 심각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7월 첫 주에는 74퍼센트)

반면, 정보 공개는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영업에 지장을 준다고 하며 이제 확진자가 다녀간 상점 등을 거의 공개하지 않는다. 가까운 곳에서 확진자가 생겨도 방역 당국이 연락해 줄 때까지 알지 못한 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초기에는 확진자 개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더니 이제는 기본적인 상황 파악조차 어렵게 하는 것이다.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깜깜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도 이런 조치와 연관이 있는 듯하다.

지난 몇 달 가까이 수많은 전문가들이 재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해왔지만 정부의 재확산 대비는 사실상 없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8월 17일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산하 8개 병원 상황을 조사한 결과 “병상 확보 계획은 국가·지자체 차원에서 불투명하며,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없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각 병원에서 매뉴얼 업데이트와 교육·시뮬레이션 훈련이 중단되어 있다.”

시립·도립 의료원에 병실을 마련해도 장비와 인력이 부족해 중환자를 받지 못하고, 생활치료시설에서는 마찬가지 이유로 고혈압만 있어도 환자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공호흡기, 음압병실, 격리 병실 어느 것 하나 준비된 게 없다. 오로지 마스크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는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식의 권위주의적 조치만 실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방역 기준 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집회를 불허하고 있다.

물론 전광훈 목사처럼 마스크도 안 쓰고, 사실상 방역을 방해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짓을 내버려 둘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집회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역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임의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다. 정부는 1년에 고작 1000건(2019년 기준)도 안 되는 지역 축제에 대한 방역지침은 제시하면서, 매년 3만~4만 건 이상 열리는 집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침도 내놓지 않았다.

확진자가 급증하자 서울·경기·인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했지만 여기에서도 문제는 정작 정부 자신이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데, 정부는 방역을 잡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다가 비판이 일자 결정을 재고해 보겠다고 밝혔다. 대형 물류센터는 운영을 허용했다.

6월 28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쿠팡 물류센터 합동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집단 감염 이후에도 쿠팡의 방역실태가 엉망이고, 정부의 후속 조치도 지독히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6월 5일 쿠팡 물류센터 4곳만 무작위로 선정해 표본조사를 하고 나머지 22곳은 지적 사항이 개선됐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최악의 상황

문재인 정부가 재확산 대비는 뒷전에 미뤄두고 ‘경제’에 집중하는 동안, 기업주들은 실적 악화를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했다. 코로나 집단 발병이 벌어진 구로 콜센터 노동자들은 최근 성과수당을 삭감당했다. 정작 원인인 에이스손해보험은 1사분기에 19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경영 악화가 예상된다며 7월부터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을 강요했는데 정작 2사분기에 화물 운송으로 흑자를 거뒀다. 아시아나항공도 화물부문 실적 호조로 1000억 원 넘는 흑자를 냈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건 한푼도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노동조건을 악화하고 노동자들의 저항을 어렵게 하는 법률들을 줄줄이 국회에 상정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작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동법 개악 법안들이 국회에서 곧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의 삶을 공격하고 방역조치 완화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른 나라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도 기업의 이윤 보호라는 자본주의 국가의 우선 순위를 충실히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번 확산이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 살리기를 더 중시한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 당장 병상과 인력을 준비시켜야 한다.